

< 붙임 >

제14차 UNCSD회의의 참가결과

I. 회의 개요

- 일시 및 장소 : '06.5.1~12(각료회의 : 5.10~12), 뉴욕 유엔본부
- 참가 : 191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, 국제기구·NGO 대표 등 약 1,500명(우리나라는 환경부차관을 수석대표로 15명 참가)
- 의제 및 목적
 - 에너지, 기후변화, 대기오염 및 산업발전 분야에서의 JPoI, MDG 및 의제 21의 목표달성을 위한 각국의 이행상황 및 장애요인 검토
 - ※ '07년에는 금년도의 장애요인 평가를 토대로 국제사회가 추진하여야 할 4개 분야에 대한 정책결의문 채택

II. 회의 주요결과

□ 총괄

- 참가자들은 에너지, 산업발전,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가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라는데 인식공유
 - 16억 인구가 전기 없이 생활하고 24억 명이 전통적인 Biomass를 연료로 사용하는 등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충족 미흡
 - 특히 아프리카, 군소도서국가(SIDS), 최빈국(LDC)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 필요성 증대
- 또한 4개 분야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다른 분야보다 장기적이고 통합된 접근방법이 필요
 -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과 산업발전이 필요하나 이로 인한 대기오염,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 발생

- 근대적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빈곤퇴치, 대기오염 저감, 여성과 아동의 복지문제와도 연관
- 4개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개도국들의 인적, 기술적 능력(Capacity)과 가용재원의 부족을 지적
 - 최근 급격한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 안보문제의 심각성 공감
- 장애요인 극복을 위해 ODA 및 GEF 등 재정확대, 기술이전 및 인적·제도적 능력배양(Capacity Building)의 필요성을 강조
 - 선진국들은 Good Governance, 제도와 규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, 국제적 파트너십 확대, 민간참여 확대 등을 강조
- 또한 에너지 효율향상, 에너지 믹스, 청정에너지기술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,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정책의 중요성 등 논의

□ 지속가능발전 장애요인 및 제약사항

- 에너지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장애요인으로 에너지 서비스 접근에서 성차별문제, 고비용으로 인한 농어촌지역에 대한 전력공급 애로,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공급불안과 함께
 - 왜곡된 에너지가격, 약한 에너지 규제, 공공인식 부족, 기술부족, 정부정책결정의 비통합성, 공급업자의 독과점
 - 정보와 투자재원 확보 곤란, 제도적·법적 체계 미비, 연구개발 비용 부족, 재생에너지의 낮은 기술력 등을 지적
- 산업발전 분야에서는 개도국들의 낮은 수준의 기술에 의한 대량생산, 국내외자본 유치를 저해하는 경제여건과 함께
 - Good Governance 미흡,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대한 부적응, 저렴한 에너지 사용을 강요하는 경쟁상황,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, 중소기업 지원체계 미비 등을 지적

- **대기오염 분야**의 제약요인으로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한 이해부족, **경제성장 및 빈곤퇴치와 오염통제간의 상관관계** 외에
 - 규제 · 모니터링 · 오염통제권의 분산,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족,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한 자동차의 증가 등이 거론
- **기후변화**에서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**시장유인정책 미흡**,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,
 - **완화정책과 적응정책의 이분법적 접근**, 재생에너지 분야 CDM 사업의 고비용, 자료수집 · 분석 · 예측능력 부족 등이 장애요인으로 논의

□ 정책방향

- **에너지 분야**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계획에 **에너지 접근 전략과 에너지 효율목표를 포함하고**,
 - 민간부문 투자 촉진을 위한 건전하고 예측 가능한 **법규 및 조세 체계**, 여성을 포함한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참여, **에너지 수요 관리정책**이 필요
 - 또한 **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행태 조성**, 기술혁신, 교통부문 효율 향상, 효율적 에너지 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제고, 도시개발 계획에 에너지 효율 고려
 -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술력,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역할과 R&D 기금조성을 통한 **신 · 재생에너지 기술개발**을 강조 하고, 대체 에너지로 핵에너지 사용에 대해 우려 표명
- **산업발전 분야**에서는 **정치 · 사회적 안정성**, 예측가능한 정치적 · 법적 체계, 노동자 교육 · 훈련, **에너지 · 용수공급 · 교통 인프라** 구축 필요
 - 또한 자연자원의 효율적 사용, 지속가능한 생산 · 소비체계 구축, **3R(Reduce, Reuse, Recycle) 정책 추진** 등 강조

- **대기오염 분야**에서는 에너지, 교통, 폐기물관리, 건강과 기후 등을 관통하는 **통합적 전략**이 필요하고,
 -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지역적·국제적 협력, 모니터링 및 대기환경기준 강화, **대중교통 체계 확충**, 연비제고 및 무연휘발유 사용강제 등 **자동차 오염관리 필수**
- **기후변화**에 있어서는 국제적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,
 - 기후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, 개도국에서의 **적응정책 중요성**, 탄소시장 형성을 위한 **정부역할**, 국제파트너십의 중요성 공감

□ 의제21 및 JPoI 이행수단

- Clean Energy and Development Investment Framework(세계은행), ODA, GEF 등 국제기금의 **확충**
- 민간부문의 참여 여건 형성을 위한 **건전하고 투명한 규제체계** 확립, 예측 가능한 조세체계 등 정부의 선도적 역할 중요
-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개도국들에게 **무역기회 제공**, 부채탕감 필요
- 빈곤층의 에너지 접근 보장을 위한 **전략적 보조금** 창설, 공공과 민간부문 간의 파트너십 형성, 이해관계인의 참여제도 확립
- **청정개발체제(CDM) 사업 제도 개선** 및 절차 간소화, 대개도국 기술이전, 개도국의 제도적·기술적 능력형성, 교육·훈련필요
- **지적재산권 보호**, 과학기술협력 강화 및 R&D 확대, **남남협력 강화**, 관련 국제기구간 협력 프로그램 마련
- **에너지, 교통, 토지이용 부처간의 조정체계** 개선, 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, 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 등

□ 지역별 논의 및 기타

- 아프리카 지역은 심각한 빈곤문제, 에너지 관련분야의 투자 부족, Governance 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관심 촉구
- 서아시아 지역은 대부분이 산유국임에도 20%인구가 근대적 에너지 서비스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
- 유럽 및 북아메리카 지역은 에너지 안보, 공급의 안정성, 수요와 가격 등이 중요한 이슈로서 **에너지빈곤**이 가장 중요한 문제
- 아태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어 **서울 이니셔티브** 및 **'Green Growth'**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
 - 일부국가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부문이 농업이라고 강조하고 식량안보의 위협을 우려
- **군서도서국**논의에서는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적응정책의 중요성과 **SIDS** 지원을 위한 **국제 프로그램 확대**를 요구
 - ※ 13차 당사국총회의 결정으로 금년부터 매 총회마다 SIDS day를 지정하여 이들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 논의
- **Major Group**과의 대화에서는 여성, 청소년, NGO, 농부단체 등이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 그룹의 역할과 이행활동에 대해 논의
 - **핵에너지 기술의 확산**은 지속가능발전이 아님을 확인하고, 모든 단계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보장을 주장
- 부대행사 등 기타
 - CSD에 등록된 28개 국제파트너십이 참여하여 활동의 진행상황, 각각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**"partnership Fair"** 개최

- 주요그룹, 각국 정부, 국제기구 등이 주최하는 **89개 부대행사**가 개최되어 의제와 관련된 정보와 경험을 교환

Ⅲ. 정부대표단 주요활동

□ 수석대표 활동상황

- **각료회의 기조연설**(5.10, 수)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과 입장을 소개
 - 에너지, 산업 및 교통 등의 정책에 환경성이 고려되는 **통합적 접근과 에너지 수요관리, 조세정책의 중요성** 강조
 -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, EPR,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정책 등 우리나라의 우수 정책사례 소개
- 미국, 호주, 핀란드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장관들과 **양자회담**을 통하여 환경관련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

《인도네시아(환경부 차관보, 5.10)》

- 기후변화대응 양해각서가 금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 되도록 추진하고, 동남아시아 국가의 환경관련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인도네시아측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
- '06.12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**국제환경기술박람회**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

《호주(환경·유산부장관, 5.10)》

- 아·태 파트너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 지속
- 현재 가서명('06.2, 외교부와 주한 호주대사) 상태인 한·호주 철새 보호협정(KAMBA)이 정식 체결되면 양국간 전문가 교류를 추진

및 세부적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실무자급 협의 지속 합의

- 호주는 **고래보호**를 위한 자국의 입장을 한국정부가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지지를 요청(관련부처에 호주입장 전달 약속)

《미국(국무부차관, 5.11)》

- 아·태 파트너십 활동계획이 구체화된 성과에 양국이 공감하고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
-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 질문에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임을 표명

《일본(환경성차관, 5.12)》

- 녹색성장 및 서울 이니셔티브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의 관심사항에 대해 토의

《핀란드(환경부장관, 5.11)》

- 금년 9월 핀란드에서 개최되는 ASEM 정상회의와 회의기간 중에 개최되는 한-EU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간 협조방안에 대해 논의
-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협상 절차에 대한 논의와 UNEP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**북한환경시범사업**에 핀란드 정부의 협조 당부

□ 실무대표단 활동사항

- 주제별 논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발표하고 국제적 논의 동향 파악
- 유럽 및 아태지역 Session에서 '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이니셔티브'에 대해 언급하고 지역 내 경험 공유와 협력을 강조

- 대기오염 Session에서 교통, 에너지, 산업 등과의 통합적 접근 필요성과 함께 우리나라의 CNG버스 정책 등 소개

○ 이스라엘 환경부 대기보전국장과의 환경협력 논의

-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“자발적 온실가스 배출등록”사업 관련 이스라엘의 Bench Marking 협조 약속

IV. 관찰 및 평가

□ 에너지, 산업발전,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정책의 통합추진 필요

- 회의에 참가한 대부분의 국가대표, 전문가 들은 4개 주제의 깊은 연관성과 함께 관련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통합적 접근 강조
 - 우리의 경우 분야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통합정책 수립에 애로
- 따라서 4개 분야의 효율적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 구축 필요

□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적응분야 기술개발 등 연구 필요

-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완화정책과 함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응정책을 같은 비중으로 취급
 - 따라서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중심으로 시작단계에 불과한 적응관련 연구 활성화 및 적응정책 수립 시급

□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투자확대 및 상용증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 필요

-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,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각국 정부는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박차
 -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의 산유국마저도 자국의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사항을 발표

- 우리나라도 “발전차액보조금” 등을 통해 신·재생에너지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예산투자와 정책적 노력 필요
- **GEF, ODA 등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기금에 기여 확대**
 - 개도국들은 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ODA 및 GEF 등 국제기금의 확대 요구
 -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ODA 및 GEF 등 국제기금에 대한 기여 확대 필요
- **국제사회의 동향 파악 등을 위해 국제회의에 적극적 참가 필요**
 - 이번 회의의 주제가 에너지, 산업발전,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으로 관련 부처의 적극적 참가가 필수적이며 환경부만의 참가만으로는 적정한 대처 곤란
 - 향후 UNCSD 주제도 농업 및 산림정책, 운송, 해양 등으로 관련 부처 및 전문가의 적극적인 회의 참가 필요